

# 과태료 고지 사칭까지...일상 속 더 교묘히 파고든 스미싱

### “쓰레기 분류 잘못, 과태료 확인하라” 속여 전화번호 입력하면 정보 빼내 정부24 사칭 문자 주의...광주·전남 4년간 전화금융사기 피해액도 1천억

일상에서 흔히 통보되는 각종 과태료 고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최근 광주·전남 지역민에게 무더기 발송되고 있다.

특히 해당 문자를 통해 들어간 사이트가 정부 공공기관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들어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하면 개인정보가 순식간에 털려 부작용이 우려된다.

21일 광주·전남경찰청에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피해 건수는 2020년 4860건, 2021년 8457건, 2022년 7729건, 2023년 7580건으로 코로나를 거치며 크게 늘었다.

피해금액도 2020년 228억원, 2021년 330억원, 2022년 239억원, 2023년 200억원으로 매년 200억원 수준에 달한다.

특히 최근에는 스미싱 범죄(문자메시지인 SMS와 Phishing의 합성어)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광주경찰청에 접수된 스미싱 피해는 2019년 9건, 2020년 25건, 2021년 32건, 2022년 22건, 2023년 55건으로, 5년 사이 8배 가까이 증가했다.

스미싱도 최근 점점 더 교묘하게 일상을 파고 들고 있다. 최근 분리수거 잘못, 쓰레기 무단투기 외에도 도로교통법 위반, 경범죄 위반 통지 등 다양한 과태료 부과 문자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을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인 '파밍(Pharming)'과 합쳐지면 더 교묘해지고 있다.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지난 6일 '민원24'라는 제목으로 "쓰레기 분류가 잘못됐으니 과태료 고지를 확인하라"는 문자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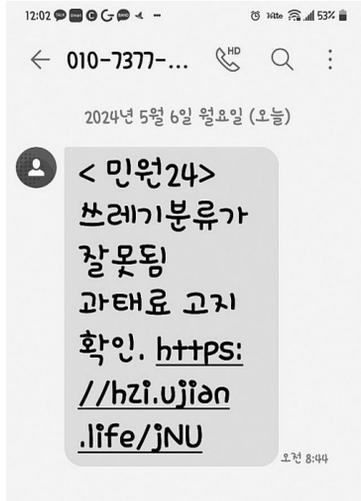
김씨가 과태료라는 말에 깜짝 놀라 문자에 첨부된 URL을 누르자 정부24 홈페이지로 연결됐다. 홈페이지 상단엔 본인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해달라는 창이 떠있었다. 번호를 입력하던 김씨는 순간 수상함을 느끼고 인터넷으로 검색해본 뒤야 스미싱 문자라는 걸 깨달았다.

김씨는 "정부24 홈페이지와 너무 똑같아 사기라는 걸 눈치채기 어려웠다"며 "번호를 다 입력하지 않아 다행이지만 URL을 눌렀기 때문에 해킹이 됐을까 걱정이다. 부랴부랴 휴대전화를 초기화했다"고 불안감을 호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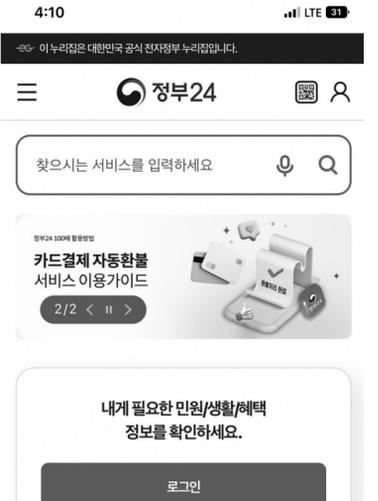
김씨 외에도 지역 맘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과태료 문자를 받았는데 이게 진짜인가요?"라고 묻는 게시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쓰레기 투기를 영상녹화로 포착했다'거나 '3회 미납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위협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까지 있었다.

또 '070' 등의 번호가 아닌 010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발송된 스미싱 문자들은 URL을 통해 정부24와 흡사한 홈페이지로 연결된다는 공통점이 있



과태료 고지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왼쪽)에 포함된 URL을 클릭하면 정부24를 사칭한 홈페이지(가운데)로 연결된다. 진짜 정부24 홈페이지(오른쪽)와 달리 휴대전화 번호 입력을 요구한다.



다.

정부24를 사칭한 홈페이지 상단에는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고 적혀 있고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서비스창까지 그대로 구현되는 등 휴대전화 번호 인증란을 제외하면 실제 정부24 홈페이지와 구분하기 힘들다.

다만 사칭 홈페이지에서는 다른 서비스창을 클릭

하면 '휴대폰 번호 조회후 이용가능합니다'고 뜬다는 차이가 있다.

광주시 남구의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최근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문자를 받았는데 구청에서 보낸게 맞느냐는 문의전화까지 자주 온다"며 "지자체에서는 모든 과태료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공문(과태료 고지서)을 보내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절대 문자로 보내지 않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지난 3월부터 '스미싱 확인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카오톡 플러스친구에 '보호나라'를 추가하고 채팅창에 스미싱 확인이 필요한 문자를 입력하면 스미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문자에 포함된 URL의 악성 행위를 분석해 정상, 주의, 악성 단계로 위험도 분석결과를 안내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 광주지법 100번째 국민참여재판...살인미수 60대 징역 5년

여성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A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재성)는 살인미수, 특수상해, 특수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감금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받았다. 이번 재판은 광주지법에서 열린 100번째 국민참여재판이다. 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밤 10시 10분경 진도군의 한 농장에서 B씨를 둔기로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뒤

바다에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5-7월 사이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14차례에 걸쳐 문자·전화로 스토킹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광주지법 해남지원에 기소된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고 법원이 수용했다.

A씨는 "피해자와 연인관계"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는 "농장 일을 도와주는 지인일 뿐이고 자신과의 관계에 집착한 것 같다"고 엇갈린 증언을 했다.

배심원들은 살인미수 등 대부분 혐의에 대해 만

장일치로 유죄로 봤으나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배심원 9명 중 8명은 4년 6월의 징역형을, 1명은 1년 3월의 징역형을 의견을 냈으나,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배심원 재판제도다. 배심원들은 변론을 듣고 평의를 거쳐 피고인의 유·무죄를 만장일치 또는 다수결로 판결하고 양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검찰,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흉기 피습범인 60대 A씨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 결심 공판에서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10년간의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 부과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전

망대에서 흉기로 이 대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하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공격으로 이 대표는 내경정맥이 9mm 손상되는 상처를 입고 수술과 입원 치료 후 8일 만에 퇴원했다.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사상 초유의 선거 범죄로 기존 정치테러와 비교해도 비단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의 선고는 7월 5일 열린다.

/연합뉴스

## 바지선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양식장 27곳 적발

### 여수·고흥 등 임금 체불도

외국인 근로자를 가두리양식장 바지선에서 살게 하고 임금을 체불한 여수·고흥지역 사업장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여수·고흥 지역 가두리양식 사업장 107곳을 대상으로 일제감독을 벌여 27곳에서 위반사항 28건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업장 10곳은 임금 전 제공하기로 한 숙소와 다른 열악한 숙소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장 7곳은 바다 위 바지선에 기숙사를 설치했고, 나머지 3곳은 컨테이너 등 가설 건축물을 기숙사로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장은 외국인들을 바다에서 생활하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 4곳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취소·제한했고, 외국인 노동자가 계속 일

하기를 희망하는 6곳에 대해서는 숙소를 주택으로 변경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다.

나머지 18건은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됐다.

이중 임금 600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사업장에게는 즉시 임금을 지급하도록 했고 고용 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취했다.

한편 고용허가 취소·제한 제재를 받으면 해당 사업주는 최대 3년까지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내부 게시판에 구의원 비판 글 공무원 송치

광주 북구청 내부 전산망 익명게시판에 구의원 비판글을 올린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북부경찰청은 지난달 25일 구청 새울지방행정시스템(행정 전산망) 익명 게시판에 기대서 의원에 대한 비판글을 올린 북구청 공무원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의견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구의원이 지난 3월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 '아니 의원님 말씀해보셔야'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

에는 '본인이 벌금형을 받았으면서 무슨 패배 영항평가 개선 권고사항을 적극 반영했다는 건가'라는 내용이 담겼다. 구 의원은 해당 게시글이 고의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A씨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적시해 명예훼손 혐의가 있다고 봤다.

한편 구 의원은 본인과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 2곳에 수의계약을 풀아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